

2027학년도 XXXX 모의고사

국어영역 해설

문항	정답	문항	정답	문항	정답
1	②	11	④		
2	⑤	12	②		
3	①	13	④		
4	③	14	③		
5	①	15	③		
6	④	16	②		
7	③	17	④		
8	②	18	⑤		
9	②	19	②		
10	②				

1

정답: ②

평가 작동: 발표의 도입부 및 전개부에서 화자가 활용한 언어적 표현 전략을 식별한다.

정답 근거:

도입부(1문단)에서 발표자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씨에 태양광 발전 패널의 효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라며 기존 지상 태양광 발전의 한계를 환기하는 질문을 던진 후, 이를 극복할 화제인 '우주 태양광 발전'으로 유도하고 있다.

오답 분석:

- ①: 논쟁적 사안이나 상반된 전문가 입장의 대비는 발표에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원리를 '3단계 메커니즘(공간적·절차적)'으로 설명했지, 기술 발전의 역사적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다.
- ④: 예상되는 청중의 반론을 선제적으로 언급하거나 한계가 과장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은 없다. 오히려 4문단에서 비용과 우주 쓰레기 등 과제가 만만치 않음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 ⑤: 마이크로파나 렉테나 같은 전문 용어가 나오긴 하나, 이를 '감각적 경험에 비유'하여 설명한 부분은 없다.

2

정답: ⑤

평가 작동: 발표에 쓰인 시각 자료의 형태가 화자의 실제 구두 설명(활용 목적)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파악한다.

정답 근거:

발표자는 4문단에서 초기 건설(발사) 비용의 한계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의 [자료 1]은 '발전 원리와 메커니즘'을, ㉡의 [자료 2]는 '재난 지역으로의 무선 전송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해 활용되었다. 시각 자료를 '건설 비용이라는 경제적 한계'를 강조하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설명은 화자의 목적과 전혀 다르다.

오답 분석:

- ①: [자료 1]을 통해 태양 에너지 수집 → 마이크로파 변환 → 렉테나 수신의 3단계를 보여주었다.
- ②: [자료 1]은 고도 3만 6,000km의 위성과 지상 수신 장비(렉테나)의 공간적 관계를 보여준다.
- ③: [자료 2]의 빔 방향 전환 묘사는 전력 공급의 유연성을 부각한다.

- ④: [자료 2]는 지진이나 태풍으로 전력망이 파괴된 재난 지역에 에너지를 신속히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

정답: ①

평가 작동: 지문에 쓰인 문법 요소(인용, 보조 용언, 종결 표현)가 화자의 태도(확신, 유보, 권유 등)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정답 근거:

【A】의 "확신할 것이라고들 확신합니다"에서,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고' 뒤에 복수를 뜻하는 접미사(또는 보조사적 쓰임) '-들'이 결합되었다. 이는 단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임을 나타내어, 주장의 객관성과 보편성을 부각하는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①은 가장 적절한 분석이다.

오답 분석:

- ②: 【B】의 "될 것으로 보입니다"에서 보조 용언 '-아/어 보이다'가 쓰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정적인 예측을 피하고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내는 유보적 태도일 뿐이다. '실패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은 뉴앙스의 명백한 왜곡이다.
- ③: 【C】의 "기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는 의문형 종결 표현을 활용해 완곡하게 청중의 공감과 기대를 유도하는 것이지, 자신의 확신을 철회하거나 판단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다.
- ④: 【A】와 【B】에 행위자를 숨기는 피동 접미사가 핵심적으로 활용되지 않았으며, 주관을 객관으로 과장하려는 의도와도 거리가 멀다.
- ⑤: 【C】에서 청중의 기대를 완곡하게 유도하기는 했으나, '막대한 비용 문제 해결에 물리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강제'하는 내용은 발표의 흐름과 완전히 어긋난다.

4

정답: ③

평가 작동: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입론에서 제시한 쟁점의 핵심 논지와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여 요약한다.

정답 근거:

찬성 1은 전면 금지의 이유로 '학습 분위기 저해 방지', '학습권 침해 방지', '교권 침해 방지'를 들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은 입론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오답 분석:

- ①: 찬성 1의 입론("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위축")과 정확히 일치한다.
- ②: 반대 1의 입론("청소년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과 일치한다.
- ④: 반대 1의 입론("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율적 역량")과 일치한다.
- ⑤: 반대 1 역시 찬성 측의 반대 신문에 답하며 "즉각적인 제재도 필요하지만"이라며 문제 상황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5

정답: ①

평가 작동: 반대 신문 과정에서 질문자와 답변자가 상대의 논리에 대응하는 대화적 전략을 파악한다.

정답 근거:

【A】에서 반대 2는 "억압적인 통제는 오히려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 등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드는 '풍선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며 정책의 부작용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②: 물론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며 일부 인정했고, 전면 부인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 ③: 생물학적 이유를 근거로 든 적이 없다. 단순히 교육적 접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 ④: 반대 1은 기존 방식을 유지하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치회 규약에 따른 벌점 부여라는 새로운 대안을 냈다.
- ⑤: 두 구간 모두 통계 자료의 출처를 지적하는 내용은 없다.

6

정답: ④

평가 작동: 화법 담화(토론)의 세부 논점들이 작문(초고)의 각 문단에 어떻게 수용·변형·배치되었는지 교차 추적하는 과제이다.

정답 근거:

(나)의 3문단은 "강압적인 조치는 학생들의 반발심을 부추겨 음성적인 사용을 늘릴 뿐, 스마트폰 과의존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서술한다. 이는 (가)에서 '반대 2'가 반대 신문에서 제기한 "몰래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드는 풍선 효과"라는 논점을 정확히 수용하여 강압적 통제의 한계를 비판하는 논거로 삼은 것이다.

오답 분석:

- ①: ㉠에서 우려에는 공감했으나, 바로 뒤 문장에서 "강압적인 일괄 수거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했으므로 확일적 수거에 완전히 동의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②: 문단 ㉠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 '통제의 한계(역효과)'를 지적한 것이며, 방과 후 전면 허용을 주장한 것도 아니다.
- ③: ㉠의 디지털 리터러시는 '찬성 1'이 아니라 '반대 1'이 제안한 대안이며, 정규 교과목 신설을 주장하지도 않았다.
- ⑤: ㉠은 학생들 스스로 논의를 거친 규약을 제정하자는 '반대 1'의 자율적 합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이지, 교사 주도의 엄격한 처벌 규약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7

정답: ③

평가 작동: 초고의 문단별 내용 조직 방식과 수사적 표현 전략을 식별하는 문항이다.

정답 근거:

(나)의 초고 어디에도 "타국의 유사한 법제화 실패 사례를 비판적으로 인용"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는 강압적 조치의 부작용(풍선 효과)을 근거로 한계를 입증했을 뿐이다.

오답 분석:

- ①: 1문단에서 "최근 '교실 내 스마트폰 금지법'이 통과되면서..."로 시의성을 부각하며 시작하였다.
- ②: 2문단에서 "나 역시 수업 시간에 올리는 알림음 때문에 집중력을 잃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경험을 환기하였다.
- ④: 4문단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통제'가 아니라 '교육'이다"라며 대비를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⑤: 5문단에서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라며 마무리하였다.

8

정답: ②

평가 작동: 고쳐쓰기의 두 가지 조건(① 항해/바다 비유적 표현 사용, ② 3주체의 협력적 노력 촉구)을 모두 충족하며, 초고의 핵심 주제(통제보다 교육과 협력, 자율적 규약)와 맥락이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문항이다.

정답 근거:

- ②는 "거친 디지털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 "튼튼한 돛"이라는 항해 비유를 사용하였고(조건 ① 충족),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인 규칙을 만들어... 함께 시작하자"며 3주체의 협력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조건 ② 충족). 또한 초고의 주제(통제보다 교육, 자율 규제)와도 정확히 부합한다.

오답 분석:

- ①: 해석 비유는 있으나, 초고의 주제(자율과 교육)에 반하는 강압적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 ③: 배 비유는 있으나, 인터넷 인프라 확충 촉구는 글의 주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 ④: 배 침몰 비유는 있으나, 처벌 수위 강화 감시는 초고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
- ⑤: 수레 비유를 썼고, 조건인 '항해/바다' 비유를 충족하지 못했다.

9

정답: ②

평가 작동: 초고의 내용 조직 방식과 정보 전개 전략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답 근거:

초고의 어디에도 특정 현상의 기원을 '역사적 관점'에서 '통시적(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으로 분석하여 미래 방향을 유추하는 서술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분석:

- ①: 1문단에서 버려지는 식량(3분의 1)과 온실가스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 ③: 1문단에서 개념을 정의하고, 2문단(맥주박)과 3문단(뭇난이 농산물)에서 활용 사례를 나열했다.
- ④: 1~3문단에 걸쳐 환경 문제 해결,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영양 제공 등의 장점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 ⑤: 4문단에서 소비자의 심리적 거부감과 공정 비용이라는 한계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10

정답: ②

평가 작동: 주어진 의미적 조건(핵심 소재, 해결책 속성)과 형식적 조건(비유적 표현, 의문문)을 모두 만족하는 제목을 판별한다.

정답 근거:

- 핵심 소재 포함: "푸드 업사이클링"
 - 해결책 속성의 비유적 표현: "기후 위기를 구하는 구명조끼" (기후 위기에서 지구를 구하는 해결책이라는 속성과 비유법 충족)
 - 의문문 형식: "바뀌 보지 않겠습니까?"
- 따라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분석:

- ①: 비유적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③: '버려진 식재료의 마법사'라는 비유는 있으나, 환경 오염을 극복하는 '해결책'으로서의 속성이 아니라 맛과 영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④: 의문문 형식은 있으나 명확하고 강력한 '비유적 표현'이 부재하다.
- ⑤: 비유적 표현이 없으며('눈부신 폭발적 성장세'는 관용적 수식어), 시장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환경적 해결책의 속성이 약하다.

11

정답: ④

평가 작동: 복수의 외부 자료(통계, 인터뷰, 기사) 핵심 정보를 정확히 독해하고, 이를 초고의 특정 문단(4문단, 5문단)의 논리적 방향성에 모순 없이 결합(정합성)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과제이다.

정답 근거:

[자료 2] (나)의 전문가 인터뷰는 신뢰 확보를 위해 "업사이클 식품 인증 마크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며 제도의 '도입/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④는 이를 "인증 마크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한 결과가 글로벌 시장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는 자료의 핵심 논지(메커니즘)를 완전히 정반대로 왜곡하고 역시 인과 관계로 엮어버린 심각한 오류이다.

오답 분석:

- ①: (가)의 시장 전망 통계 수치를 활용해 4문단의 "2026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전망에 객관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 ②: (나)의 맛 확보와 투명한 공정 공개를 4문단에서 제기한 '위생에 대한 막연한 우려(심리적 거부감)'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다.
- ③: (다)의 정부 지원 인프라(연구 센터, 물류망 지원)를 4문단의 '물류 및 공정 비용 문제'를 해결할 정책 사례로 보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훌륭하다.
- ⑤: (나)의 인증 제도(소비자 신뢰)와 (다)의 인프라 지원(정부 정책)을 통합하여, 4문단의 한계를 모두 극복하는 5문단의 최종 결론(해결책)으로 덧붙이는 것은 정합성이 높다.

12

정답: ②

평가 작동: 두 편의 설명문에 제시된 정보의 존재 여부와 핵심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식별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답 근거:

(가)의 2문단에서는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명확히 입증되는 부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과 동향만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저작권이 부여된 구체적인 '최근 법원 판례'의 이름이나 사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②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 분석:

- ①: (가) 1문단에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③: (나) 1문단에 ㉔(TDM 면책)과 ㉕(공정 이용)이 AI 산업계가 내세우는 제도적 근거이자 법적 원칙임이 명시되어 있다.
- ④: (나) 2문단에 상업적 AI 모델이 원작자의 결과물을 모방한 대체재를 생산해 기존 창작 시장을 심각하게 잠식하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 ⑤: (나) 2문단에 창작자들이 ㉔(옵트아웃)의 법제화와 함께 "학습 데이터 활용에 대한 투명한 보상 체계 마련"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13

정답: ④

평가 작동: 독서 과정에서 수집한 (가), (나)의 핵심 정보가 학생의 초고 (다)의 논리 전개에 어떻게 내면화되고 구조화되었는지 추적한다.

정답 근거:

(다)의 필자는 1문단에서 "TDM 면책 조항 신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 1문단에 제시된 AI 기업들의 입장(일일이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을 수용하여, (다)의 2문단에서 "사전 동의(Opt-in)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국내 AI 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핵심 논거로 연결하였다.

오답 분석:

- ①: 기계의 독자적 창작권을 전면 인정하자는 주장은 (다) 초고의 논지(창작자와의 상생, 인간 창작자 권리 존중)와 정반대되는 왜곡이다.
- ②: ㉔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명확히 입증되는 부분'에 한정된 것인데, 이를 '인간의 개입이 전혀 없는 산출물'로 대상을 교묘히 교체하였다.

③: 필자는 (다) 2문단에서 사전 동의(Opt-in) 방식을 강력히 비판하며, 옵트아웃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⑤: 필자는 (다) 3문단에서 AI 학습이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하지 않으며 공정 이용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읽은 것은 필자의 논지와 정반대이다.

14

정답: ③

평가 작동: 논증하는 글을 구성하는 다양한 논증 요소(주장, 이유, 근거, 예상 반론 등)가 글의 논리적 방향성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정답 근거:

(다)의 2문단에서 필자는 사전 동의 방식을 강제할 경우 자본력이 약한 국내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시장을 완전히 내어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는 "TDM 면책 조항 신설을 지지하기 위한 근거일 뿐이지, 외국 빅테크 기업의 국내 진출 자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인 것이 아니다.

오답 분석:

- ①: 1문단 서문에 나타난 필자의 거시적 핵심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 ②: 2문단에서 사전 동의 방식의 비현실성을 TDM 면책 조항 도입의 '이유'로 타당하게 제시하였다.
- ④: 3문단에서 AI 학습 메커니즘을 설명하며 공정 이용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적 '근거'로 적절히 활용하였다.
- ⑤: 5문단의 결론부 서술 방향과 완벽히 부합한다.

15

정답: ③

평가 작동: 새롭게 제공된 외부 텍스트(〈보기〉)의 상반된 논리를 분석하고, 이를 원천 텍스트(가, 나)의 개념망과 연결하여 필자의 논증(TDM 면책 + 옵트아웃 도입 지지)을 강화하는 '대안적 반박' 구조를 완성하는 문항이다.

정답 근거:

〈보기〉는 필자의 근거(AI는 원본을 대체하지 않는다, 옵트아웃 제도가 절충안이다)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두 가지 문제('암기 현상'으로 인한 시장 대체, '옵트아웃'의 책임 전가)를 제기한다. 필자는 이를 『A』의 예상 반론으로 겸허히 수용하되, 본래의 주장(기술 혁신과 상생의 절충)을 포기하는 대신 "원본 재현 방지 필터링 의무 부과"와 "통합 옵트아웃 플랫폼 구축"이라는 〈보기〉의 실현 가능한 보완책을 제시하여 자신의 논증을 더욱 정교하게 방어하는 ③이 논리적으로 가장 완벽하다.

오답 분석:

- ①: [DD-30] TDM 면책 조항을 비영리 학술 연구로만 제한하자는 것은 상업적 AI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필자의 핵심 주장을 스스로 폐기하는 논리적 자가당착이다.
- ②: [DD-13] 옵트아웃을 폐지하고 사전 동의(Opt-in)로 회귀하자는 주장은 (다)의 2문단에서 필자가 "AI 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가장 맹렬히 비판했던 방식이다.
- ④: [DD-30] 창작자의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유예하자는 극단적 주장은 (나)에서 경계한 극단적 옹호의 오류이며, (다) 1문단에서 필자가 천명한 "창작자와의 상생"이라는 거시적 목적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 ⑤: [DD-6] 창작자가 일방적으로 시장 가치 훼손을 감수해야 한다는 반박은, 공정 이용의 본질적 기준(가)을 부정하는 폭력적 논리이며 역시 필자의 '상생' 논조에 어긋난다.

16

정답: ②

평가 작동: 두 편의 설명문에서 명시적·암묵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고, 글에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식별하는 과제다.

정답 근거:

(가)의 2문단 마지막 부분에서 기업이 환경적·사회적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부정적 외부효과를 자발적으로 내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에게 정부가 어떠한 '법적 면책 조항'을 제공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답 분석:

①: (가) 2문단에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어 생산을 장려한다고 확인할 수 있다.

③: (나) 1문단에서 과거에는 님비와 핼피가 나뉘었으나, 최근에는 유지 희망과 자원 고갈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다.

④: (나) 2문단에서 수치 예측이 명확하더라도, '지역 경제 도약'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나) 2문단에서 어느 한 가치를 일반적으로 희생시키기보다는 두 가치의 공존을 모색하는 의사 결정이 요구된다고 확인할 수 있다.

17

정답: ④

평가 작동: 독서 자료(가, 나)의 핵심 학술 개념이 작문 산출물(다)의 논리적 전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연계 양상을 추적한다.

정답 근거:

(나)의 2문단 결론부에서는 복합 딜레마 상황에서 "어느 하나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 첨단 기술이나 새로운 제도적 틀을 통해 두 가치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은 이를 받아들여 (다)의 4문단에서 "기술적 혁신과 기업의 자발적 내부화(가)의 개념)를 통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유치)과 환경적 우려(자원 고갈)의 공존이 가능함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분석:

①: (다)에서는 정부의 세금이나 환경 부담금 징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체 비용을 부담하는 '자발적 내부화'를 주장하고 있다.

②: (다)의 자산지소 모델은 국가 주도의 통제 전략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창출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③: (다) 1문단에서 찬반 논쟁이 뜨겁다고 했으므로, 님비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독이다.

⑤: (나)는 정보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충돌의 문제라고 했으며, (다)에서도 반대 측 주장이 비합리적 비판이 아니라 "타당한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18

정답: ⑤

평가 작동: 논증 평가의 3대 기준을 통해 초고의 내용 조직과 논리적 오류 여부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과제다.

정답 근거:

⑤ 필자는 4문단에서 반대 측의 우려(자원 고갈)에 대해 '액침 냉각 기술', '자체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기술 혁신과 자발적 내부화 전략을 제시하며 재반박하였다. 이는 상대의 반론을 논리적으로 극복하여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강화한 것이므로 '타당성'을 충족한 적절한 평가이다.

오답 분석:

①: 불리한 수치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상반되는 관점을 3문단에서 분명히 예상 반론으로 다루었음에도 이를 '배제했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

③: 주장의 '타당성'은 이유와의 논리적 연결을 뜻하며, 의견 수렴 절차 유무는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직접적 잣대가 아니다.

④: (다) 3문단에서 필자는 반대 측 우려를 "타당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공정하게 다루었다. 감정적 호소라고 깎아내린 적이 없으므로 틀린 평가다.

19

정답: ②

평가 작동: 외부 자료(보기)의 핵심 개념을 지문(가, 나)의 학술적 프레임에 맞게 해석한 뒤, 초고(다)의 글쓰기 방향성(찬성 및 반론 극복)에 정합적으로 결합하여 결론 문단을 완성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정답 근거:

(가)에서는 기업이 환경적 비용을 선제적으로 부담하는 '자발적 내부화'를 언급했고, (나)에서는 딜레마 상황에서 어느 한 가치를 일반적으로 희생시키지 않고 두 가치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보기>의 '위터 포지티브'는 기업이 물을 환원(생태 프로젝트 투자 등)하여 부정적 외부효과를 자발적으로 내부화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역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긍정적 외부효과까지 창출하는 전략이다. 이는 필자가 반론을 극복하기 위해 4문단에서 내세운 "자발적 내부화를 통한 통제"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따라서 딜레마(경제 vs 환경)를 극복하고 합리적 선택(유치)을 하자는 흐름이 초고의 결론으로 가장 완벽하다.

오답 분석:

①: <보기>는 기업의 자발적 약속과 투자를 강조하고, (다) 역시 기업의 '자발적 내부화'를 지지하고 있다. 정부의 세금 부과를 의무화하지는 것은 필자의 논조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 위터 포지티브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전략이다. 또한 (나)는 단일 가치 집중이 아닌 '공존' 모색을 강조했다.

④: (나)에서 가치 충돌은 예측 불가능한 정보 때문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투명한 수치 공개 여부만으로 반대 여론이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

⑤: <보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선도적 사례를 든 것일 뿐, 국내 기업 배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 논리적 비약이다.